

‘특별한 희생’ 동두천, ‘특별한 보상’ 절실



동두천시는 74년간 국가 안보라는 대의명분 아래 도시 면적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내어준 ‘특별한 희생’의 도시다. 그러나 개발 정책과 재정 악화, 지역 경제침체라는 악순환이 거듭된다. 이에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

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시대적 정의를 바탕으로, 동두천시가 겪는 구조적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주도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의 해법을 집중 조명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오른쪽)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미군공여지 지원정책을 건의했다. (사진=동두천시)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가 경기 북부 동두천시를 찾은 자리에서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김 지사에게 동두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청해 주목됐다. 요청의 핵심은 ‘미군공여지 지원정책’과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이다.

박 시장이 거듭 강조한 배경에는 74년간 이어져 온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이 있다. 박 시장은 “동두천시는 시 면적의 42%를 미군공여지로 제공하며 국가안보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해 온 도시”라며 “여전히 공여지로 인한 도시성장 정체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부족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지역 현안 해결을 넘어,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서 치른 막대한 대가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는 절규에 가깝다.

안보 희생 대가, 25조의 경제적 손실

동두천시는 지난 수십 년간 국가 안보라는 대의 아래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짊어져 왔다. 박 시장이 언론 기고문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동두천시는 시 면적의 42%에 달하는 땅을 미군 공여지로 내줬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전국 미반환 미군 공여지의 70%가 여전히 동두천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도시 개발과 발전에 치명적인 족쇄로 작용해왔다. 군사시설 보호와 개발 규제로 인해 동두천은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새로운 산업 유치와 도시 인프라 확충에 극심한 제약을 받아왔다. 박 시장은 “지난 74년간 누적 손실 규모가 무려 25조 원에 이른다”고 밝히며 이 희생의 규모를 수치로 환산했다.

이러한 현실은 동두천시의 도시 경쟁력을



▲박형덕 동두천시장, 미군 미반환 공여지 문제 해결 요구와 동두천시의회(오른쪽) 지원요구 시위 모습. (사진=동두천시·시의회)

전국 미반환 미군 공여지 70% 집중…도시 면적 42% 재정자립도 최하위 악순환…‘국가 주도 보상책’ 촉구

경기도 최하위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현재 동두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며, 지역내총생산(GRDP) 역시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별한 보상’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

미군 공여지 반환 지연과 더딘 개발은 지역 경제의 침체와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키며 ‘지방 소멸’의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다.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도시에 정작 돌아

온 것은 끝없는 정체와 소외의 그림자인 셈이다.

박형덕 시장과 동두천시민들이 염원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이다. 박 시장이 제시하는 해법은 명확하다. 바로 ‘국가 주도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다.

동두천시는 이미 국가 안보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해왔던 지리적 이점과 군사 관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미군 공여지 반환이 완료되거나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국

가가 직접 주도하여 방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이는 단순히 손실을 메우는 보상을 넘어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정책이 될 수 있다.

클러스터 조성은 △첨단 방위산업체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재정자립도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장기간 묶여 있던 미활용 토지가 국가 전략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변모함으로써, 동두천은 대한민국 안보의 희생지에서 미래 안보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정의로운 보상은 국가적 책무 이행

동두천시의 요구는 ‘공여지 개발 활성화’라는 단편적인 이슈를 넘어선다. 이는 헌법 가치인 ‘균형발전’과 ‘정의로운 보상’에 대한 국가적 책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미 국가 안보를 이유로 막대한 희생을 치른 평택시의 경우, 특별법을 통해 대규모 재정 지원과 개발이 이뤄져 인구가 급



증하고 도시가 성장하는 모범 사례를 보였다. 동두천시의 희생이 평택시에 비해 결코 작지 않음에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크다.

이제 정부와 경기도가 응답할 차례다. 동두천시의 간절한 요청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 온 동두천 시민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곧 ‘정의로운 국가’를 실현하는 길이다.

동두천시에 대한 국가 주도의 실질적인 지원만이, 지난 74년간 쌓인 지역민의 희생과 고통을 보듬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신선오 기자